

# 독립보고메커니즘(IRM): 대한민국 최종보고서 2016-2018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생 정지인

## 목차

평가에 관하여	6
공약 이행	8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11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15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19
2. 공공데이터 개방	22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29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33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37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40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43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46
방법론적 소고	49

## 개요: 대한민국

2018 독립보고메커니즘(IRM) 최종보고서 2016-2018

대한민국 정부는 제 3 차 국가실행계획 13 개 공약을 이행하는 데 계속해서 강력한 결의와 헌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10 개 공약은 완료, 3 개 공약은 상당 수준 완료 평가를 받았다. 완료 평가를 받은 공약들은 대부분 공공데이터, 전자정부, 반부패, 시민참여사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 공약들에서 의도한 결과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실행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각국 정부의 정부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강화, 부패척결,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신기술 활용에 관한 대국민 공약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국제 이니셔티브다. 독립보고메커니즘(IRM)은 각 OGP 참여국 활동을 검토한다. 본 보고서는 2016 년 10 월부터 2018 년 6 월까지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2018 년 10 월까지의 일부 진행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행 첫 해에 행정자치부에서 명칭이 변경된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OGP 공약들 간 조율을 담당하는 주관 부처다. 2017 년 6 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신임 OGP 최고지도자(executive leader)가 되었다.<sup>1</sup> 범정부 OGP 참여 노력은 소수의 행정부처와 기관, 몇몇 독립 위원회 참여에 그쳤다. 2017 년 8 월 제 3 차 실행계획 수립 후 이행 첫 해에 정부는 다중 이해관계자 실무단인 대한민국 OGP 포럼(OGP Korea Forum)을 발족하였다. 동 포럼은 11 개 시민사회단체와 11 명의 국가 공무원<sup>2</s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 차 실행계획은 정보와 공공데이터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둔 공약들을 담고 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대한민국 OGP 포럼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행계획 이행 11 개월 후 발족된 포럼이 실행계획 수립에 영향을 줄 기회는 거의 없었다.

표 1: 한눈에 보는(At a Glance)		
	중간	최종
공약 수	13 (14)	
<b>완료 수준</b>		
완료	6	10
상당한	7	3
제한적인	0	0
미착수	0	0
<b>기준 충족 공약 수</b>		
OGP 가치와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 공약	11	11
변혁적인 잠재적 영향력이 있는 공약	0	0
상당히 이행되었거나 완료된 공약	13	13
<b>위 세 기준 모두 충족하는 공약 (⊕)</b>	0	0
<b>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b>		
상당히 기여함	2	
괄목할 정도로 기여함	0	
<b>향후</b>		
차기 실행계획 이월 공약 수	2	

본 보고서 작성 시점 현재 공식 대한민국 정부 자체평가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체평가 영문본이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2018년 9월 14일 12개 공약으로 구성된 제 4차 국가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제 3차 실행계획 공약 중 4차 계획으로 이월된 공약은 없었으나 공공데이터와 시민참여 관련 두 공약이 각각 3차 계획 공약 2a 및 3a와 유사한 면이 있었다. 정부는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착수하여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개혁을 발전시키기 위해 OGP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100대 국정과제는 5개년 국정계획<sup>3</sup>으로 제 4차 국가실행계획 기획보고서(Design Report)에서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

<sup>1</sup> 2019년 4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진영 장관이 부임하였다.

<sup>2</sup> 2019년 11월 보고서 발행 시점에 대한민국 OGP 포럼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1개 시민사회단체와 7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sup>3</sup> Sohn JiAe, "President Moon unveils five-year policy agenda(문 대통령 5개년 국정과제 공개)", Korea.net, 2017. 7. 19., <http://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148013>.

## 이행 기간 중 시민사회와의 협의

OGP 참여국들은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기간 중 협의를 위한 절차를 따른다.

각 공약 담당 정부 관계자들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위원들은 OGP 참여와 공동창조 기준 매뉴얼(OGP Participation & Co-creation Standards Manual)에 규정된 규칙과 빈도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재로 국가정보원에서 진행된 이행 기간 중 협의 절차에 참여하였다. 공약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구두 및 서면 형식으로 답변과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는 회의에서 모든 위원에게 배포되었다. 동 회의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위원들에게만 보고되었다. 모든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위원(코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오픈넷, 정의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중간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해 OGP 참여와 공동창조 기준 매뉴얼에 규정된 빈도로 우려사항 및 질문 제기 기회를 가졌다.<sup>1</sup>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인 열린정부 포럼은 이행 논의를 위해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열렸다. 공식적으로 특정 위원이 구체적인 공약을 감독하도록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감독 과정에서 특정 공약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전문지식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내놨다.<sup>11</sup> 월 회의에서는 서면으로 제기된 우려사항들에 대해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회의는 2017년 10월 19일과 2017년 11월 7일 두 차례 열렸고 독립보고메커니즘 연구원도 참석하였다. 독립보고메커니즘 연구원은 신년회의라고 알려진 2018년 1월 5일에 열린 제 3차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자체평가보고서 한국어본<sup>2</sup>은 실행계획 수립 기간 중과 이후의 협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고, 국민의견 수렴 기간은 OGP 정책에 따라 2주간 진행되었다. 정부는 2018년 한시적으로 정부혁신국민포럼<sup>3</sup>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동 홈페이지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당시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은 OGP 실행계획, 자체평가 보고서 및 독립보고메커니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이행 기간 중 협의

정기적인 다중 포럼	중간	최종
1. 포럼이 존재하였습니까?	예	예
2. 포럼이 정기적으로 열렸습니까?	예	예

표 3: 이행 기간 중 국민 영향력 수준

독립보고메커니즘은 국제시민참여협회(IAP2) ‘참여 스펙트럼(Spectrum of Participation)’을 조정하여 OGP 에 적용하였다.<sup>4</sup> 동 스펙트럼은 실행계획 내용에 대한 시민의 잠재적 영향력 수준을 보여준다. 국가들 대부분 OGP 정신에 따라 ‘협업(collaborative)’을 지향해야 한다.

실행계획 이행 기간 중 시민 영향력 수준		중간	최종
권한 강화	정부가 시민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넘겨주었다.		
협업	대화가 빈번히 이뤄졌으며 시민들이 의제 설정에 기여하였다.		
참여	정부가 시민 의견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	✓
협의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정보 제공	정부가 시민들에게 실행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협의를 없음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sup>1</sup> 연구원은 모든 행사에 참석하였고 대한민국 담당자인 행정안정부 이유진 사무관과의 전화통화 협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회의 날짜는 2017. 10. 19. (보고회의), 2017. 11. 23. (보고회의), 2018. 1. 5. (신년회의)이었다.

<sup>2</sup> “South Korea Mid-Term Self-Assessment Report 2016–2018(대한민국 중간자체평가 보고서 2016–2018)”,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7. 11. 17.,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sup>3</sup> “메인페이지 홈”, 정부혁신국민포럼, <http://www.innogov.go.kr>.

<sup>4</sup> “IAP2’s Public Participation Spectrum(IAP2 시민참여 스펙트럼)”, 국제시민참여협회(IAP2), 2014, [http://www.iap2.org/resource/resmgr/foundations\\_course/IAP2\\_P2\\_Spectrum\\_FINAL.pdf](http://www.iap2.org/resource/resmgr/foundations_course/IAP2_P2_Spectrum_FINAL.pdf).

## 평가에 관하여

독립보고메커니즘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와 방법은 IRM 절차 매뉴얼(IRM Procedures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측정기준 중 ‘별표 공약’ (★)은 독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OGP 참여국들 간 상향식 경쟁 장려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별표 공약은 모범적인 OGP 공약으로 간주된다. 공약에 별표가 붙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별표 공약은 구체성이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공약에 활동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약의 잠재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 공약 설명에서 공약과 열린정부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공약이 정보 접근성, 시민참여 또는 공공책임성 등 한 개 이상의 OGP 가치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공약이 완전히 이행되면 ‘변혁적인(transformative)’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sup>2</sup>
- 정부가 실행계획 이행 기간 중 공약과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상당한 이행’ 또는 ‘이행 완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행계획 이행 기간 종료 시점에 별표 공약이 상당한 이행 또는 완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별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중간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실행계획상 별표 공약은 0 개 였다. 최종보고서에서 변경된 완료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한민국 실행계획상 별표 공약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섹션의 표들은 독립보고메커니즘이 보고 과정 중 수집하는 풍부한 데이터에서 발췌한 것이다. 대한민국 관련 모든 데이터셋은 OGP Explorer([www.opengovpartnership.org/explorer](http://www.opengovpartnership.org/explo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Did It Open Government?)’에 관하여

독립보고메커니즘은 정부관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최종보고서에서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물 및 결과물 측정을 넘어 공약 이행으로 정부 관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부 OGP 공약은 서면상 모호하거나 OGP 가치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지만 상당한 정책개혁을 달성하기도 한다. 반면 서면상 관련성이 있고 야심차 보이는 공약이었지만 이행 되면서 열린정부 달성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렇게 미묘한 부분을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변수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변수는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으로 정부관행 변화를 평가한다.

- 악화됨: 공약으로 정부 개방성이 악화됨.
- 변화 없음: 정부관행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
- 미미한 수준: 일부 변화가 있으나 개방성 수준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미미한 수준임.
- 상당한 수준: 정책 분야에서 정부 개방성이 진일보했으나 여전히 규모나 범위가 제한적임.
- 괄목할 만한 수준: 열린정부 달성을 통해 관련 정책분야 관행에 변혁을 가져온 개혁

동 변수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실행계획 초기 현상황을 확립한 후 정부 개방성 변화를 위해 이행된 결과물을 평가한다.

다만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IRM 최종보고서는 이행 주기 종료 후 불과 몇 개월 안 된 시점에 준비된다. 동 변수는 2년 이행 기간 종료 시점에 정부 개방성 관행에서 관측될 수 있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잡한 방법론적 함의와 보고서 기간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와 변수를 통해 영향(impact)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

<sup>1</sup> IRM Procedures Manual(IRM 절차 매뉴얼),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irm-procedures-manual>

<sup>2</sup> 국제전문가패널(International Experts Panel)은 2015년 이 기준을 변경하였다. <http://www.opengovpartnership.org/node/5919>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약 이행

### 전반적인 공약 개요

OGP 참여국들은 2 개년 실행계획에서 공약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아래 표들은 기간 종료 시점 완료 수준과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척도 관련 진행상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중간시점에 완료된 공약들은 진행상황 결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공약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2016-2017 IRM 진행상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행계획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시민참여, 공공데이터 공개,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공공서비스 윤리, 재정투명성 개선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공약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열린정부 개혁 및 시민참여 강화를 강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 3.0 이니셔티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부 3 차 실행계획 공약은 부패, 공공데이터, 시민참여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공식 발표한 5 개년 국정과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표 4: 공약별 진행상황 평가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성(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이점	이점	가치	이점	공공	시민참여	국민	투명성	윤리	기술	혁신	미	제한적	상	완	약	이	하	상	하	한	
I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		✓			✓				✓							✓			
I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			✓							✓			✓				✓			

지속적 발굴·제공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			✓					✓				✓						✓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			✓	✓				✓				✓						✓
2b.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			✓					✓				✓						✓
2c.가공·활용 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	✓			✓					✓						✓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					✓				✓						✓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				✓				✓				✓						✓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불확실함					✓				✓					✓	
4b. 대국민 서비스 포털 통합				✓	불확실함					✓				✓					✓	
4c. 대국민 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	해당사항 없음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			✓					✓										✓

조사·평가 강화																				
6a. 정보 공개			✓		✓				✓						✓				✓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			✓				✓						✓				✓	

### I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 공약 Ia.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공약 본문:**

**제목: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대학교 등 일부 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290 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2016 년 10 월부터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교육실시를 추진한다.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아직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적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6 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290 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주관 기관(들): 행정안전부

지원 기관(들):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작일: 2016 . 7. 1.

종료일: 2017. 12. 31.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성(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이 공 표	이 공 표	가 공 표	이 공 표	과 공 표	의 공 표	의 공 표	의 공 표	이 공 표	의 공 표	의 공 표	의 공 표	수 공 표	제 공 표	한 공 표	한 공 표	이 공 표	의 공 표	의 공 표	의 공 표	의 공 표	
I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		✓			✓			✓				✓					✓		

**공약 목표:**

정부는 온라인 정보 공개 절차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공립대학 등 공공기관 대상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공약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약 330 개

고등교육기관 중 286 개 전 사립대학교로 확대 적용하여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립대학교에는 4 년제 사립기관과 2-3 년제 사립 전문대학교가 포함된다. 정보공개법령<sup>2</sup>에 따라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요청이 있을 때 자체 재량 및 설정기간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다.

## 지위

### 중간: 상당한

중간보고서 작성 시점에 286 개 사립 대학교 중 280 개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사립대학교들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 요청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사립기관들의 시스템 채택 장려를 위해 언론매체 및 신문사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대학교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 이용 관련 권고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하는 대학교 직원들과 훈련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2016-2017 IRM 중간 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상당한

최종 시점에도 공약 진행상황은 상당한 수준이다. 추가적인 언론 노출 및 훈련 워크숍에도 불구하고 실행계획 주기 종료 시점에 여전히 6 개 학교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 6 개 학교들이 아직 시스템 활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내부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외부에서 만든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6 개 학교는 고려대학교, 원광대학교, 농협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다. 공약 성격과 실행계획 설명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자체 시스템을 포털로 통합 및 전환하는 사립대학교 수 확대에 힘쓰고 있다.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정보 접근성: 미미함

이 공약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정부 개방성에 미미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 공약의 적용범위와 성과는 상당히 폭넓은 수준이나 공약조건이 주로 자발적인 온라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성 관련 정부 개방성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공약에서는 시민들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사립대학교에 정보와 문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온라인 시스템 도입 전까지 개개인이 정보를 요청하고 얻기 위해서는 각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제한적이었고 이러한 규칙적이지 않은 절차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부 지도 및 운영 하에 있는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정해진 기간에 따른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정보 요청 절차가 마련되었다. 시스템 편의, 일관성, 적용 가능성 외에, 이 공약으로 학교들의 선제적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5개 대학 30여명 학생<sup>3</sup>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합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용 경험이 있는지, 시행 전 이용하던 방식보다 더 사용자 친화적이거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80% 이상이 시행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65%는 새로운 통합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용방법이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IRM 연구원은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http://www.open.go.kr))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요청 관련 설명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합시스템을 이용해본 학생들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전보다 더 많은 대학정보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시스템 시행 전 각 대학은 요청 시 학생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자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 균일성, 기간, 지침 부재가 가장 불편한 점이었기 때문에 이 공약은 공개된 정보의 양 확대 자체보다는 명확하고 통합된 시스템 기능 측면에서 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 중 시스템 시행 전후로 정보요청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모두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코디네이터<sup>4</sup>는 시스템 기능을 넘어 공개된 문서의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개요청 대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없으며 시스템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 공개된 정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분야 활동가이자 전문가인 강성국 씨<sup>5</sup>는 관련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 체제 하에서 일하다가 종종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학생들과 직원들을 상당수 보았다. 강 씨의 단체는 안정적인 시스템 기능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대학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정기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현재 도입된 시스템 세부사항 외에 정부는 추가적인 정책 및 법 개정과 함께 처음에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와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정보공개 요청 대응 담당직원 5명 중 3명이 시스템 시행 후 정보 요청이 증가하였다고 답했다.<sup>6</sup> 다른 2명은 새로 직무를 맡게 되어 시행 전 요청 건수는 모른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은 명확하지 않은 내용, 많은 경우 부적절한 표현 및 모호한 대상 단체(들)로 가득한 불만 담긴 요청들이 있어 검색엔진 필터 체계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중간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보공개 요청 처리로 야기된 행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해서 기관 ICT 부서들과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요청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대변인<sup>7</sup>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6개 대학이 매우 선별적이고 국내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참여를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정보요청 양보다는 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월되었습니까?

동 공약은 차기 실행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다.

---

<sup>1</sup> 공식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http://open.go.kr>

<sup>2</sup>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영문법령, [http://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29982&type=part&key=4](http://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29982&type=part&key=4).

<sup>3</sup> 서울 소재 5 개 대학교 학생들,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8. 11.

<sup>4</sup>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코디네이터/전 열린정부파트너십 위원,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9. 3.

<sup>5</sup>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현 열린정부파트너십 위원,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9. 3.

<sup>6</sup> IRM 연구원과 5 개 대학교(서울에 본교가 있는 2 개 대학교, 대전 지역 1 개 대학교, 대구경북 지역 1 개 대학교, 경기도 지역 1 개 대학교) 대표 응답자들과의 대화, 2019. 3. 모두 익명을 요구하였다.

<sup>7</sup> 정보공개 대변인,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8. 11.

##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 공약 본문:

제목: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정보공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의 지속적 발굴·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16 년에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취합·선정할 계획이며, 원문정보공개에 관한 Best Practice 사례를 전파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취합·선정할 계획이며, 원문정보공개에 관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주관 기관(들): 행정안전부

지원 기관(들):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작일: 2016. 7. 1. 종료일: 2018. 6. 30.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성 (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이 영 영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				✓					✓					✓					✓	

### 공약 목표:

2014 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sup>1)</sup>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최초 원문공개 시스템은 국장(즉 간부)급 공무원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승인한 문서의 원문 공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인 '정부 3.0: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일환으로 공공정보 원문공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IRM

연구원은 제 3 차 실행계획 착수 이후 통계를 구할 수 없었다.) 이 공약은 크게 공공정보 원문 공개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에 행정안전부가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주목할 만한 원문정보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정부는 또한 공개될 정보 선정 및 정보 공개 방식의 모범관행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모범관행 재현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정보 캠페인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 공약은 국민이 선정한 10 개 모범관행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 동 법률에서는 조사나 결과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 지위

### 중간: 상당한

이 공약은 중간보고서 시점에 상당한 수준으로 이행되었다. 정부 자체평가와 IRM 연구원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 개 모범 원문<sup>2</sup>은 시민 투표와 두 차례 전문가 검토 회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10 개 본문에는 초등교육 협업학습 증진 계획(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기오염 관련 방문교실 운영 계획(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서울특별시)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sup>3</sup>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문을 정보공개포털에서 배너나 팝업을 통해 홍보한 것 외에 2017 년 성과가 2017 년 7 월 연합뉴스<sup>4</sup>, 디지털타임스<sup>5</sup>, 매일일보<sup>6</sup>, 데일리뉴스<sup>7</sup> 등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IRM 연구원은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조사결과 및 10 개 모범원문이 지금도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sup>8</sup>에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중간보고서 기간까지 홍보캠페인을 시행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16-2017 IRM 중간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완료

정부는 2017 년 11 월부터 12 월까지 온라인 시민 투표와 전문가 검토 회의를 통해 모범원문(또는 정보)를 조사·선정하였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기본개발계획 초안(서울특별시), 여성 공중화장실 안전벨 계획(전라북도 정읍시), 고령화 극복을 위한 고령층 맞춤형 생활 프로그램 지원 계획(경상북도 안동)<sup>9</sup> 등이 있다. 선정된 모범관행(즉 정부의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시민들이 선정한 정보)은 2017 년 12 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공식 포털<sup>10</sup>에서 홍보·확산되었다.

실행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공약 관련 추가적인 과제도 수행하였다. 정부는 공개시스템을 보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공공정보 협의를 30 개 지역기관들과 진행하고 연례 정보공개보고서를 발표 및 배포하였다.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정보 접근성: 미미함

동 공약은 더 많은 원문 공개 및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 개방성에 미미한 수준으로 기여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보 개선이 이뤄졌다. 공약을 통해 전에는 한 번도 실시된 적 없는 공개투표 절차(open-voting procedure)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었다.<sup>11</sup> 시민들은 링크 클릭으로 10 개 모범관행의 제목, 목적, 기간, 내용, 전략, 그 동안의 진행상황, 언론보도, 후속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약 설명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관행 변화가 기대되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2014 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채택 전까지 모든 정보는 공개 요청이 있어야만 공개되어 비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겼다. 그러나 법률 채택 이래 문서를 생산하는 시점에 정부가 어떠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새로운 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투명성 제고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시민 24 명<sup>12</sup> 중 이 공약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나 응답자 대부분이 국민이 관심을 갖는 원문 및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였다.<sup>13</sup>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인 강성국 씨<sup>14</sup>는 공약의 의도는 좋으나 공개된 정보다수가 일반국민이 큰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 한 명의 인터뷰 대상자도 이러한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며 10 개 모범관행이 그렇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 공약이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에서 핵심 요소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보 큐레이션 계획을 검토하여 일반국민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를 구성·선정할 수 있다면 보다 유용할 것이다. 정부가 자체평가에서 제공한 통계는 다운로드 건수가 2013 년 1,250 만건에서 2017 년 437 만 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sup>15</sup>, 이는 공약이 실행 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강성국 씨는 더 좋은 계획이자 일반대중 이용에 보다 용이하고 더 잘 알려진 사례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꼽았다. 인터뷰 대상자들도 서울시장이 시민 시정참여 증진 토대를 마련하고 모든 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플랫폼인<sup>16</sup>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이 보다 자동적인 행정정보 공개에 더 혁신적이며 시민들이 스마트폰 및 기타 기기를 통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사업에 더 친숙할 수 있는 서울 거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공약은 전국을 범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에게 10 대 모범관행 사업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정집임 코디네이터<sup>17</sup>도 강성국 활동가 의견에 동의하며 정부가 일반시민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기본개발계획보다는 재정 문서, 내부 문서 또는 수요가 높은 문서를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약을 통해 공개된 원문은 증가하였으나 유용성 및 적용가능성 부족으로 정보 접근성 확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 이월되었습니까?

본 공약은 차기 실행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다.

- <sup>1</sup>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번역센터, 한국법제연구원, 2013. 8. 6., [http://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hseq=29982&lang=ENG](http://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hseq=29982&lang=ENG).
- <sup>2</sup> 10 개 모범원문 전체, "South Korea Mid-Term Self Assessment Report(대한민국 중간자체평가 보고서)",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7. 11. 17.,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 <sup>3</sup>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e\\_main.jsp#/L21haW4=](https://www.data.go.kr/e_main.jsp#/L21haW4=).
- <sup>4</sup> 이태수, '국공립 1 천 개 확충' 등 우수 정책, 원문 그대로 공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5140800004>
- <sup>5</sup> 임성엽, '행안부, '2017 년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 10 선' 선정', 디지털타임스, 2017. 7. 2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2502109960053005](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2502109960053005)
- <sup>6</sup> 김천규, '행안부, '2017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 10 선' 선정', 매일일보, 2017. 7. 2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07>.
- <sup>7</sup> 오지영, '우수한 정책을 원문정보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 데일리뉴스, 2017. 7. 26., <http://www.idailynews.co.kr/news/article.html?no=33673>.
- <sup>8</sup> 공영순, '초등 협력학습활성화 추진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 2017. 1. 25., 인포그래픽, <https://www.open.go.kr/html/banner/2017wonmunBest10.html>; 김희영,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기본계획',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017. 9. 7., 인포그래픽, [https://www.open.go.kr/html/banner/2017wonmunBest10\\_3.html](https://www.open.go.kr/html/banner/2017wonmunBest10_3.html).
- <sup>9</sup> 김명관,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보고', 산림청, 2017. 10. 12., 인포그래픽, [https://www.open.go.kr/html/banner/2017wonmunBest10\\_3.html](https://www.open.go.kr/html/banner/2017wonmunBest10_3.html).
- <sup>10</sup>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eng/a01/engMain.do>.
- <sup>11</sup>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eng/a01/engMain.do>.
- <sup>12</sup> 국제개발협회(IDA) 관련 일에 관여하는 NGO 직원들, 정부와 정보공개 확대 협력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활동가들, 행정안전부, IDA 및 동 공약 사업을 잘 알고 있는 학자 및 교수들, 동 공약에 대해 설명을 들은 시민 및 학생들
- <sup>13</sup> 2019. 3. 1-15 IRM 연구원의 인터뷰 응답자들(김만식, 박종우, 이용준, 조인완, 박진희, 박수혜, 김보희, 김계성, 이병호, 김기범, 송하준, 이세종, 이세정, 이중상, 김지원, 이지원, 김진향, 금기호 및 익명을 요구한 5 명)과의 면대면 인터뷰
- <sup>14</sup>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현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위원,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9. 3.
- <sup>15</sup> 공약 담당자가 제공한 정부 내부분서, IRM 연구원과의 이메일 논의, 2019. 3.
- <sup>16</sup> '시민을 위한 정보공개 서비스의 끊임없는 발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disclosure-of-information/en/>.
- <sup>17</sup>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코디네이터/전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위원,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9. 3.

### I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공약 본문:**

제목: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생활 밀접정보, 대규모 예산 사업 정보, 행정감시 정보를 사전에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정보를 선정. 공표 함으로 인해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사전공개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한 공표목록과 세부항목 묶음에 해당하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은 개발·보급하여 기관별 공표정보 건수 상향 평준화, 질적수준 제고 등을 꾀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 이행율이 평균 49.6%로 저조한 수준에(15.12 월 기준) 머물러 있다.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들의 항목, 내용 등을 일관성 있게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 이행률을 연차적으로 향상시킨다. 특히 2015 년 말 현재 49.6%에 머물러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표 이행률을 2016 년 말까지 55%로 개선시킨다.

주관 기관(들): 행정안전부

지원 기관(들):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시작일: 2016. 7. 1.

종료일: 2018. 6. 30.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 관련성 (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이 영	이 국	가 국	이 국	정 전	시 미	정 국	정 국	이 영	미 미	보 통	영 영	미 차	제 한	상 당	합 표	이 영	영 영	미 미	사 단	영 영
I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				✓				✓							✓			✓		

**공약 목표:**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이 각각의 관행(포맷, 서식, 방식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공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sup>1</sup> 대한민국 정부는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공표 정보 목록과 세부항목들을 명시하고 있는 사전정보공표 표준서식을 개발 및 배포하였다.<sup>2</sup> 정부는 특히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표준 준수율을 5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3</sup>

**지위****중간: 완료**

이 공약은 중간보고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2016년 9월 5개 중앙정부부처, 11개 지방정부, 9개 공공기관과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활용 관련 점검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 정부 관계자가 IRM 연구원에게 점검결과 검토 및 협의의 증거로 회의 일정, 참여 부처 및 공공기관, 회의 의제, 사진 등 서류를 제공하였다.<sup>4</sup> 자체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1월 30개 저성과 지방정부들과 점검결과 검토를 시행하고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활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sup>5</sup> 자체평가에는 30개 지방정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저성과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 자체평가에 따르면 2016년 말 지방정부의 공통 표준모델 활용률은 55%였다. 실행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정부 기관의 표준모델 활용 준수율도 2015년 말 80%에서 2017년 10월 91%로 증가하였다. 지방정부는 준수율이 87%로 증가하였다. 2016-2017 IRM 중간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완료**

본 공약은 중간보고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정보 접근성: 미미함**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구체적 세부항목들이 포함된)이 시간을 절약해주고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이 공약은 정보 접근성 관련 정부 개방성에 미미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 사전표준모델은 다음의 방식으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첫째, 바로 준비되는 통합 서식을 활용하여 모든 공무원의 정보입력 시간을 절약해준다. 둘째, 공무원들은 절약된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셋째, 통일된 서식으로 일반대중이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리도 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넷째, 통합 서식 활용을 장려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증가하였다. 현재 준수율은 최대 55%이지만 공약 전에는 50% 미만이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서식 통합에도 시민사회와 사용자들은<sup>6</sup> 정부가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고 환류고리 폐쇄 및 현 관행 개선을 위해 명확한 시민 환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공약이 정부 개방성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했는지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sup>7</sup> 정부는 또한 표준서식이 모든

공개되는 정보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해봐야 할 것이다. 표준서식 적용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로 모든 정보형태에 적용될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서에 일관되고 통일된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분명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방식이겠지만 이행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이었고 향후 필요한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환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공약은 개방수준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종료되었다.

### 이월되었습니까?

이 공약은 차기 실행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다.

---

<sup>1</sup> "South Korea Third National Action Plan 2016-2018(2016-2018 대한민국 제 3 차 국가실행계획)", 대한민국,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6. 10. 29.,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third-national-action-plan-2016-2018/>.

<sup>2</sup> 더 명확히 말해, 동 공약의 목표는 자동 개방(open-by-default) 방식 도입이 아닌 정보개방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sup>3</sup> 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 <https://www.open.go.kr/>.

<sup>4</sup> 고준석,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사무관, IRM 연구자와의 이메일 및 전화통화 대화, 2017. 3.

<sup>5</sup> "South Korea Mid-Term Self Assessment Report(대한민국 중간자체평가 보고서)",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7. 11. 17.,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sup>6</sup> 시민사회 구성원들, 서식 이용자들,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8. 10.

<sup>7</sup>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코디네이터/열린정부파트너십 위원, IRM 연구자와의 논의, 2019. 3., 주찬, 한국행정연구원,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9. 3., 조인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브레인 코리아(Brain Korea) 연구원, 2019. 2.

## 2. 공공데이터 개방

### 공약 2a. 공공데이터 개방-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개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사회·경제적으로 개방효과가 큰 36 대 분야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로 선정하여 정보수요자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5 년까지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정보, 상권, 부동산정보 등 11 개 분야의 개방이 완료되었으며, 2016 년까지 식 의약품종합정보등 22 개 분야의 개방이 추진된다. 국세, 사회보장, 판결문 등 3 개 분야는 단계적 개방이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학진학률, 식품방사능수치, 특허·상품 연계정보, 지식재산권정보 등 42 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개방 노력도 진행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등 2016. 7. 1. – 2018. 6. 30.)

### 공약 2b.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민간활용이 우수한 21 개 DB 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2016 년 21 개 DB 에서 2017 년 42 개 DB 로 평가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2018 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데이터에 대해 품질관리 수준평가가 이루어진다.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도 매년 양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2016. 7. 1. – 2018. 6. 30.)

### 공약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오픈포맷의 비중을 2015 년 38.9%에서 2017 년 70%로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동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존의 가공이 불가하거나(PDF), 특정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등)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갱신 시 오픈포맷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데이터가 오픈포맷으로 등록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자동으로 오픈포맷으로 변환할 수 틀(XLS->CSV)을 개발·제공하고 기관별 공개된 데이터 포맷을 측정·평가하여 자발적인 오픈포맷 데이터 공개를 장려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2016. 7. 1. – 2018. 6. 30.)

### 공약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多기관 공통 핵심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통표준 공개 대상 핵심 데이터를 선정할 것이며 2017 년까지 총 100 종의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 표준데이터 등록 시 표준적용 준수상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도구 개발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2016. 7. 1.-2017. 12. 31.)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성 (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이 표	이 표	가 표	이 표	표 적 성 취	시 미 관 여	표 적 성 취															
2a. 공공데이터 개방-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개방		✓			✓	✓					✓										✓	
2b.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			✓						✓										✓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	✓			✓													✓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		✓																✓	

## 공약 목표: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 변혁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 공약들은 네 가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정부 3.0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있다. 첫째, 22개 고수요 데이터셋 분야 공개와 국세 및 사회보장 정보 공개를 촉진한다. 둘째, 2016년 21개 데이터셋, 2017년 42개 데이터셋 및 2018년 핵심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셋째, 2017년 오픈포맷 형태로 공개되는 데이터 비율을 70%까지 확대한다. 넷째, 민간부문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총 100개 표준을 개발한다. 이러한 공약들의 누적된 시행을 통해 정부는 고수요·고품질 기계 판독 가능 데이터의 공공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 지위

### 2a. 고수요 데이터 공개

#### 중간: 상당한

중간평가 시점에 이 공약은 상당한 수준으로 완료되었다. 2017년 10월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sup>2</sup>과 정부 관계자<sup>3</sup>가 제공한 문서들에 따르면 32개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22개 분야 데이터셋과 데이터파일 등 23,084개 데이터셋을 공개하였다. 2017년 발표된 정부 중간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셋 22개 분야 중 일부(도로명 주소 데이터, 음식물쓰레기 데이터, 국가공간데이터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셋을 얼마나 자주, 구체적으로 지속 추적 관리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2개 분야에는 도로명주소 데이터, 지역재정 정보, 음식물쓰레기 데이터, 국가공간데이터, 부동산거래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아직 국세 관련 정보, 사회보장 정보 및 판결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6-2017 IRM 중간 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상당한

이 공약은 상당수준 완료되었다. 실행계획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36개 고수요 분야 데이터 공개를 약속하였다. 정부는 제 2차 국가중점데이터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이 중 15개 데이터셋이 2017년 공개되었다.( 제 2차 국가중점데이터 리스트는 정부가 파악한 대한민국 시민 선정 고수요, 고효용 데이터셋들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총 38개 분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 목록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개된 분야 15개에는 지진 대피소(행정안전부), 포괄적 일자리 정보(노동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정보(해수부)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에 따르면 사회보장 정보도 2017년 국가중점데이터 리스트에 포함되어 공개되었고 이는 2018년 최종자체평가 보고서에도 설명되어 있다. 이 공약에서는 국세, 사회보장 및 판결문 관련 정보 공개도 추진하였으나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정보 민감성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 2b.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 중간: 상당한

이 공약은 중간보고서 시점에 상당히 완료되었다. 정부가 제공한 정보와 IRM 중간 보고서<sup>4</sup>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12월까지 21개 대용량 공공데이터셋에 대한 품질 관리와 평가를 완료하였다. 데이터셋 목록에는 대기오염(한국환경공단)과 교통사고(경찰청)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정부는 교육행정 정보(교육부)와 지방재정 정보(행정안전부) 등 품질관리 및 평가를 거쳐 42개 대용량 공공데이터셋을 선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반영하며 품질관리등급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 관련 공개적으로 가용한 정보 부족으로 IRM 연구원은 이행수준을 상당한 수준보다 높게 평가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력하여 공공데이터 평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심사원을 선정하고 훈련을 제공하였다. 2016년 29명의 전문심사원이 훈련을 수료하였고 21명이 시험에 합격하였다. 2017년에는 58명의 전문심사원이 훈련을 수료하였고 24명이 합격하였다. 2017년 8월 현재 전문심사원은 45명이다. IRM 연구원은 심사원 훈련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내부분건을 받았다.<sup>5</sup> 더 많은 정보는 2016-2017 IRM 중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완료

이 공약은 완료되었다. 2017년 정부는 품질관리 및 평가를 거쳐 42개 대용량 공공데이터셋을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데이터에는 해외여행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외교부), 동물관리 정보(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병원정보(국립중앙의료원), 국회 디지털도서관 정보(국립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어서 평가 결과를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반영하여 품질관리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데이터전문가를 양성·선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였다. 기존 전문가 45명에 더해, 2018년에는 71명이 수료증을 받고 28명이 품질관리 전문가로 선정되었다. 현재 총 73명의 전문가가 있다.

## 2c. 오픈포맷 제공 확대

### 중간: 완료

이 공약은 중간보고서 시점에 완전히 이행되었다. 자체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45,155 데이터셋 중 34,004종을 공개하면서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 개방도 3단계 이상 오픈포맷으로 등록된 공공데이터 비율이 75.3%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5단계 별점 제도에 따르면 3단계는 비독점 포맷(엑셀이 아닌 CSV 등)으로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의미한다.<sup>6</sup> 또한 자체평가에 따르면 PDF 파일 업로드도 금지되었으며 자동전환툴(.xls → csv)이 개발되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sup>7</sup> 2016년 정부는 자체 모든 PDF 데이터파일 변환을 완료하였다.<sup>8</sup> 2016-2017 IRM 중간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완료**

이 공약은 중간보고 시점에 완료되었다.

### **2d. 공통 데이터공개 표준**

#### **중간: 상당한**

이 공약은 중간보고 시점에 상당 수준으로 완료되었다. 2017년 8월 현재 정부는 목표로 하는 총 100개 표준 중 79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표준에는 입찰 발표, 계약 정보, 낙찰 등 분야가 포함된다.<sup>9</sup> 자동 자체평가틀<sup>10</sup>도 2016년 개발되었다.

## **최종: 완료**

이 공약은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데이터 표준 109개를 추가로 개발하면서 2018년까지 총 120개의 공공데이터 표준이 개발되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a. 고수요 데이터 공개**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정보 접근성: 상당한**

#### **시민참여: 상당한**

공공데이터셋 공개 및 활용은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정부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약 2a는 국민에게 재사용, 재활용 및 재창조될 수 있는 고수요 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더 많이 공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동 공약에 따라 고수요·고가치 데이터셋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면서 시민과 민간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었고 특히 국가 전자조달정보가 공개되는 등 정부 투명성 수준이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투명한 이니셔티브는 시민과 신규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시장, 네트워크, 비즈니스 형성 잠재력이 큰 데이터셋 활용을 통한 권한 강화 기회를 확대한다. 이 공약은 국가중점데이터 규정 및 선정 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기업,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사용자 대상 고수요 데이터 조사가 공개될 국가중점데이터 분야 선정에 기여하였고 조사결과가 중점데이터 리스트에 반영되었다. 고수요·고가치 국가데이터 우선 공개 정책을 실시한 결과, 2017년부터 공공데이터 재사용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조, 신제품 기획, 생산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sup>11</sup> 파괴적 기술(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지원, 포괄적 열린정부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산업 및 업종 간 융합 등 세 가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제 2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2017-2019)에 포함되었다. 국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달성하면서 정보 접근성 및 시민참여 측면에서 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되었다.

### **2b.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정보 접근성: 미미함

전반적인 공공기관 품질관리 활동 평가를 통해 공공데이터 수집, 생산, 운영, 제공 등 각 데이터 생애주기 단계별 품질관리 기본 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공약은 정부 개방성에 미미한 수준으로 기여하며 이행 완료되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면서 이제 일관적이고 통합된 방식의 대국민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공약 시작일 전까지는 민간기업들이 데이터를 정제해야 했으나 이제 제공되는 데이터셋을 정제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품질관리가 이뤄졌음에도 전반적인 공개정보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몇차례 진행된 인터뷰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기업을 키우면서 특정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신생기업 데이터 전문가 및 기업인 3 명<sup>12</sup>은 제안된 품질관리 표준과 관련하여 일부 긍정적인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부평가 전후로 데이터셋에 큰 개선이나 변화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2018 년 공공데이터 재사용 기업(응답자 1,500 명)에 대한 조사 결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만족도는 5 점 만점에 3.40 점이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에 반영하였다. 이는 정보 접근성에 미미한 개선이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3</sup>

## 2C. 오픈포맷 제공 확대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정보 접근성: 미미함

###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기술과 혁신: 미미함

대한민국 정부가 한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등 특정 소프트웨어나 PDF 등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포맷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 등록을 장려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오픈포맷 데이터 공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이 완료되면서 기술수단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어 정부 개방성이 미미하게 개선되었다. 이 공약으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http://www.data.go.kr)) 에 새로 등록되는 공공데이터셋은 오픈포맷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2017 년 12 월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상 오픈포맷 데이터셋 비중은 제 3 차 국가실행계획에 언급된 비중을 초과하는 79%다. 이렇게 큰 공약에서 이뤄진 모든 노력이 정부의 대대적인 오픈포맷 데이터 공개, 개선 및 전환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공약은 주목할 만하며, 이는 공공데이터 관행의 중요한 전환이다. 이 공약을 통해 정부는 고수요·고가치, 기계 판독가능 데이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의 전반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2d. 공통 데이터 공개 표준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정보 접근성: 미미함

지금까지 여러 정부 기관과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각각의 방식과 분류체계로 데이터셋을 업로드하고 공개하였다. 그러다보니 데이터 이용 전 추가적으로 조정 및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다.

이 공약 완료에 힘입어 정부는 제 3 차 국가실행계획에 언급된 목표치를 초과하는 100 개 이상의 공통표준 항목에 합의하였다. 또한 자동 자체평가 툴을 개발하여 공무원들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규 데이터셋을 등록 및 업로드 할 때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공약은 일관되고 신뢰할만하며 쉽게 처리가능한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통해 정부 개방성에 미미한 정도로 기여하였다.

## 이월되었습니까?

공약 2a 와 2b 의 일부가 큰 변경사항 없이 차기 실행계획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계속해서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과 연계하여 환경, 안전과 의료 등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공공분야에서 효용성, 수요,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 데이터를 공개하고자 한다. 제 4 차 국가실행계획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sup>1</sup> 실행계획에는 종료일이 2017 년 12 월 31 일로 되어 있으나 대국민 공공데이터 공개 클러스터 에 있는 다른 공약들과 같은 기간이 반영되도록 2018 년 6 월 30 일까지 평가가 이뤄졌다. “Open Government Partnership: the 3<sup>rd</sup> National Action Plan(열린정부파트너십 제 3 차 국가실행계획)”, 대한민국,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6. 10. 29., 33 쪽 참조.,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wp-content/uploads/2018/01/South-Korea\\_NAP3\\_2016-20181.pdf](https://www.opengovpartnership.org/wp-content/uploads/2018/01/South-Korea_NAP3_2016-20181.pdf).

<sup>2</sup>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e\\_main.jsp#/L21haW4=](https://www.data.go.kr/e_main.jsp#/L21haW4=).

<sup>3</sup> 송희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사무관, IRM 연구자와의 논의, 2017. 12.

<sup>4</sup> 위와 동일.

<sup>5</sup> IRM 연구원과의 이메일 대화, 2019. 3.

<sup>6</sup> 5 Star Open Data(별 5 개 공공데이터), <http://5stardata.info/en/>.

<sup>7</sup> “South Korea Mid-Term Self Assessment Report(대한민국 중간자체평가 보고서)”,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7. 11. 17.,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sup>8</sup> 김수진, 행정안전부 사무관,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8. 3.

<sup>9</sup> 위와 동일.

<sup>10</sup> 공공데이터포털, <http://gooddata.go.kr>.

<sup>11</sup> ‘2018 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8. 3. 19., <https://bit.ly/2Tng7e5>.

<sup>12</sup> 스타트업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 전문가들,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8. 11.

<sup>13</sup> ‘2018 년 공공데이터 이용 공기업 설문조사’, 공공데이터포털, 2019. 6. 26., [https://www.data.go.kr/information/PDS\\_000000000000663/recsroom.do](https://www.data.go.kr/information/PDS_000000000000663/recsroom.do).

<sup>14</sup> “South Korea Action Plan 2018-2020(2018-2020 대한민국 실행계획)”, 대한민국,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8. 9. 14.,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action-plan-2018-2020/>.

###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공약 본문:**

제목: 시민참여-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국민디자인단은 2014 년부터 디자인을 정책에 접목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민참여 모델이다.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Pool 을 당초 1,300 여명에서 2,000 명 수준으로 확대 하고,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생활안전 등 분야별 디자인과제를 발굴. 개 선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학 등과의 협력 및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내실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특화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이 구성되고 디자인 과제가 추진되었다.(총 382 개 ~ '16.12) 정부는 지자체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국민디자인단 pool 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관 부처(들): 행정안전부

지원기관(들):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등

시작일: 2016. 7. 1. 종료일: 2018. 6. 30.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성 (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개방성에 기여하였습니까?						
	이 영	이 구	가 구	이 내	전 포	시 민	국 민	타 부	이 위	영 향	미 미	보 통	변 형	미 착	제 한	상 한	압 력	아 하	영 향	미 미	사 단	한 민	
3a. 정책개발에 대한 시민참여	✓				✓					✓							✓			✓			

**공약 목표:**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부터 공무원, 시민, 서비스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참여정책 모델 ‘국민 디자인단’을 시범 운영하였다. 동 모델은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 증진을 목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 참여와 공공서비스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382 개 국민디자인 과제(중앙 부처 44 개, 지방정부 338 개)를 이행하고 2016년 성과공유 행사를 조직하고 총 국민 디자인단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 지위

### 중간: 완료

이 공약은 정부가 실행계획에서 약속한 모든 과제를 이행하면서 중간보고서에서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2016년 382 개 프로젝트(또는 디자인 과제)를 이행하였고 총 3,800 명이 참여하였다. 전년도에는 2,500 명이 참여했었다.<sup>1</sup> 자체평가에 따르면 사회복지, 일상생활 안전, 문화와 관광 등 광범위한 과제들에 중앙정부 부처들이 참여하였으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제에 참여하였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자체평가에 따르면 2017년 273 개 신규 과제가 개발되었고 중앙부처가 39 개, 지방정부들이 234 개 개발하였다.<sup>2</sup> 정부는 페이스북<sup>3</sup> 과 국내 검색엔진 네이버(Naver) 온라인 플랫폼(cafe.naver.com/govservicedesign)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상황 보고 및 결과를 올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민 디자인 시민단 우수 사례 시상식을 주최하였다.<sup>4</sup> 이 행사에서는 인천시 국민디자인팀이 시행한 ‘Let 美 in 산단-노동자가 웃는 아름다운 공장’ 등 우수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이 주목되었다.<sup>5</sup> 행정자치부는 2017년 2월 ‘사례로 배우는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을 발표하였다.<sup>6</sup>

정부는 또한 실행계획에 언급된 공약 범위 외 활동들도 완료하였다. 대국민서비스를 일종의 전반적인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sup>7</sup> 정부는 디자인단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디자인단에게 과제발굴, 과제운영, 역량강화 등 각 과제 운영 단계별로 맞춤형 훈련 및 워크숍을 지원하였다.<sup>8</sup> 2016-2017 IRM 중간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완료

이 공약은 중간보고서 작성 시점에 완료되었다.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시민참여: 미미함

이 공약은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 개방성에 기여하였다. 열거된 활동과 개념들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시민공간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운영 공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if World Design Guide 에서 서비스 디자인 및 성과가 인정되어 금메달을 수상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모델은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였으나 공약 설명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잠재적 영향력을 미미한 수준보다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2018 년 6 월 30 일 총 382 개 과제를 선정하면서 국민 디자인단 참가자 풀이 3,800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국가실행계획에서 약속한 수치를 초과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일상생활 안전, 문화, 관광 등 분야별로 다양한 디자인 과제를 포함시켰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었다. 이 공약으로 정부 계획 및 감독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시민참여 기회가 증가하였음에도 공약 효과가 미미한 것은 무엇보다 부진한 인식제고 때문이었다. 이 이니셔티브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몇 백에서 천 명 외에 시민참여 사업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NGO 대표 또는 활동가들은 이 공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이 공약을 통해 정책수립 초기, 중간, 최종 단계에서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안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홍보, 규모, 재현가능성 부족으로 시민참여 관련 정부 관행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사회 대표 5 명<sup>9</sup> 모두 이 공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 대표임에도 국민 디자인단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홍보 부족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인터뷰 과정 내내 취지와 성과는 훌륭하지만 일방적으로 참가자 풀을 늘리기보다는(디자인단 참여자들에게는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중간 또는 최종 과제평가를 시행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국민이 접근하여 의견을 내고 디자인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공약을 더 많은 국민에게 홍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sup>10</sup> 시민참여 정책수립 이니셔티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NGO 들이 중간보고 및 완료 시점까지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특히 활동 수립과 관련하여) 공약에 대하여 가치 있는 의견을 낼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시점 사이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 이월되었습니까?

이 공약은 차기 실행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기 실행계획에도 행정안전부의 동일 부서 국민참여정책과가 운영하는 유사하게 설계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공소통포럼이 포함되어 있다. 새 공약은 정부가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대국민 정책논의 포럼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협업 기반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경로 및 플랫폼 다각화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 공약을 발전시킨 것이다.

<sup>1</sup> '2014-2018 국민디자인단 과제 목록', 네이버,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633>.

<sup>2</sup> 위와 동일.

<sup>3</sup> 국민디자인단 커뮤니티,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ovservicedesign>.

<sup>4</sup>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 디자인사업 과장, IRM 연구자와의 대화, 2017. 11.

---

<sup>5</sup> 김현진, ‘인천공장 알록달록 색입히다’, 경기신문, 2016. 12. 21.,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941>.

<sup>6</sup> ‘한국디자인진흥원 매뉴얼’, 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 18., <https://bit.ly/2TvsHYv>.

<sup>7</sup>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Law Viewer(법률 뷰어), 2015. 11. 18. 마지막으로 개정됨,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37058&type=sogan&key=15](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37058&type=sogan&key=15).

<sup>8</sup> “South Korea Mid-Term Self Assessment Report(대한민국 중간자체평가 보고서)”,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열린정부파트너십), 2017. 11. 17., p. 58,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sup>9</sup> 서울에 본부를 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IRM 연구원과의 전화통화, 2018. 12.

<sup>10</sup>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대한민국 OGP 포럼 위원, IRM 연구자와의 논의, 2019.

##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공약 본문:

제목: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한국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은 UN 전자정부 평가결과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환경이 PC 에서 다양한 기기의 웹브라우저 이용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간 Active-X 나 특정 브라우저 등 비표준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보편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비표준기술의 제거,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호환성 확보 등의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표준 기술에 해당하는 Active-X 를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는 경우 2017 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웹 표준기술로의 대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체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의 Active-X 부터 우선 제거하여 2017 년까지 액티브 X-free 율을 95% 수준까지 올리며, 국민 불편과 관련 없는 행정내부용 홈페이지의 Active-X 는 점진적으로 제거를 추진한다.

대민서비스 분야의 Active-X 를 우선 제거하고자, 2016 년 1,638 개 홈페이지에서 3,321 개의 Active-X 를 제거하고, Active-X 제거 달성률을 88.1%로 목표로 하며, 2017 년에는 나머지 844 개 홈페이지의 2,161 개를 제거하여 95.1%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내부용 홈페이지의 경우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주관 기관(들): 행정안전부

지원 기관(들):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시작일: 2016 . 7. 1. 종료일: 2018. 6. 30.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이 영 표	이 구 크	구 크 크	이 구 크	구 크 크	이 구 크	이 구 크	이 구 크	이 구 크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불확실함				✓					✓				✓			

**공약 목표:**

이 공약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Active-X 를 제거하고 대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은 1996 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인터넷 브라우저와 앱 내 다중매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Active-X 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Active-X 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플랫폼에서는 호환되지 않는다. Active-X 가 구식의 불편한 기술이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대체기술을 찾는 어려움과 높은 전환 비용 때문에 Active-X 시스템을 제거하는 데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 공약은 점진적으로 Active-X 를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 비율을 늘려 2017 년까지 전면 제거하고 Active-X 대체 앱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위**

**중간: 상당한**

중간보고서 시점에 동 공약은 상당한 수준으로 완료되었다. 정부가 제공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2016 년 12 월 Active-X 가 제거된 홈페이지 비율은 87.3%였다. 2017 년 6 월까지 Active-X 제거 공공서비스 홈페이지 비율은 93.1%였다. Active-X 제거 홈페이지 비율은 실행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에는 다소 못 미쳤다. IRM 연구원은 실행계획 본문의 구체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 번째 공약활동 완료에 대해 상당한 수준보다 높게 평가할 수 없었다. 다음의 정부 조치들은 대체 애플리케이션 지원과 관련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다. 자체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2016 년 3 월 홈페이지 수준 진단, Active-X 제거 및 기타 비표준 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6 년 말 450 여개 행정 및 공공 기관 홈페이지의 웹호환성과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2017 년 4 월 Active-X 등 비표준 기술 제거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2017 년 5 월 웹표준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Active-

X 제거를 주제로 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열었다. 2016-2017 IRM 중간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상당한

OGP 밖에서는 Active-X 제거가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공약이 크게 수정되었다.<sup>3</sup> 목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전산 및 기술 솔루션 제공 전문가 및 엔지니어들과 협업하여 2020년까지 모든 Active-X 를 제거하는 것이다. 정부 자체평가에 따르면 Active-X 제거율은 95%가 되었다.<sup>2</sup> 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완료를 상당한 수준보다 높게 평가할 수 없다. 플러그인 이용 방지를 통해 Active-X 이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 워크숍, 훈련을 시행했다는 기록들이 있다.<sup>3</sup>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정보 접근성: 변화 없음

시민참여: 변화 없음

공공 책임성: 변화 없음

공약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약이 대한민국 전자정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 일으킬 수 있었지만 이는 기술적인 조정이다. 온라인 거래 및 전자정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Active-X 제거 노력을 했지만 공약에서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 약속하면서도 대체기술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약은 상당한 수준으로 완료되었으나 이는 기술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정부 개방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또한 이 공약이 정보 접근성, 시민참여, 공공책임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기술과 혁신 등 OGP 가치와 명확한 연관성이 없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공약은 OGP 가 요구하는 2년 기간 내 성공적으로 완료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목표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 3명 가운데 공약 이행 전에 비해 달라진 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향을 받은 홈페이지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자신의 주업무가 아닌 이상 일반시민이나 전문가들이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IRM 연구원은 공약이 정부 개방성에 대한 영향에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이월되었습니까?

동 공약은 차기 실행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다.

<sup>1</sup> Cho M.H, "South Korea to remove 90 percent of ActiveX by 2017(대한민국, 2017년까지 Active-X 90% 제거 목표)", ZDNet, 2015. 4. 2., <http://www.zdnet.com/article/south-korea-to-remove-90-percent-of-activex-by-2017/>.

<sup>3</sup> 이재상, "설치하시겠습니까? 공공기관 사이트서 액티브 X 없앤다", News1, 2018. 11. 6., <http://news1.kr/articles/?3469431>.

---

<sup>2</sup> “End-of-Term Self-Assessment Report on 3rd National Action Plan (2016–2018)(제 3 차 국가실행계획에 대한 최종자체평가 보고서(2016-2018)”,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대한민국 정부, 2018. 3. 접속,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wp-content/uploads/2018/11/South-Korea\\_End-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https://www.opengovpartnership.org/wp-content/uploads/2018/11/South-Korea_End-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sup>3</sup> Idem.

##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 공약 4b.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포털 통합

**Text 공약 본문:** 복지, 고용, 중소기업지원 등 각 서비스 영역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된다. 제공 부처 중심의 포털구축과 고유의 서비스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필요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대국민 온라인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부처시스템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서비스 플랫폼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차적으로 2016 년에 민원 24, 정부대표포털, 수혜자맞춤형서비스의 통합이 추진되며 2017 년 이후 복지포(복지 포털)·워크넷(고용 포털) 등 타 부처 포털과의 연계가 이루어질게 될 것이다. 현재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이 되는 3 개 시스템(정부포털+맞춤형혜택안내+ 민원 24)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2017 년 이후 복지포(복지), 워크 넷(고용) 등 부문별 서비스포털과의 통합·연계를 추진한다.

주관 부처(들): 행정안전부

지원 기관(들):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시작일: 2016. 7. 1. 종료일: 2018. 6. 30.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성 (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임 표	임 표	가 장	에 해	정 적 적 적 적 적															
4b. 대국민 서비스 포털 통합			✓		불확실함				✓						✓		✓			

### 공약 목표:

현재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부처는 모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포털을 갖추고 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마다 고유의 ‘분류방식’이 있어 사용자가 이러한 차이들을 구분하고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공약은 행정안전부 권한 하에 있는 세 주요 시스템인 정부대표포털, 맞춤형혜택안내, 민원 24 을 포함하는 통합 온라인포털 구축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행정포털을 구축한 뒤 두 번째 활동으로 타부처 서비스 포털(복지로와 워크넷 등) 통합 및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 지위

### 중간: 완료

중간보고서 작성 시점에 이 공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2017년 7월 현재 민원 24(진정제기 홈페이지), 한국 정부대표 포털(정책정보 포털), 수혜자맞춤형서비스포털(맞춤형 혜택 포털)이 정부 24라는 단일 온라인 포털로 통합되었다.<sup>1</sup> 정부 자체평가에 따르면 정부 24는 13,900개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7만 여개 정부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sup>2</sup> 이에 더해 소득확인(홈택스), 건강보험자격 관련 정보 및 국민연금 자격 변경 등 22개 핵심 대민 정부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제공된다. 두 번째 활동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등 22개 정부기관이 통합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sup>3</sup> 복지로와 워크넷도 정부 24에 통합되었다. 복지로(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증명서 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편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수당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 강연 등록 및 단기 방문상담 프로그램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약을 담당하는 공무원<sup>4</sup>이 제공한 상세한 세부 정보를 토대로 정부 24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연구원에게 전달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아직 타 부처 및 서비스의 포털 통합을 장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실행계획에 언급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공약은 이행 완료되었다고 평가되었다. 2016-2017 IRM 중간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완료

통합포털에 연계될 서비스포털 전체 목록과 관련하여, 실행계획에서 모호한 기간과 설명을 감안하며 공약이 중간보고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부는 실행계획에 언급된 정부 24 착수를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 6월까지 중앙부처 서비스 107종을 통합하였다.<sup>5</sup>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정보 접근성: 변화 없음**

**시민참여: 변화 없음**

**공공 책임성: 변화 없음**

공약 이행수준은 완료로 평가되었으나 행정안전부 포털 통합 및 타 부처 가입 장려가 최종 완료라는 점에서 정보접근성, 시민참여 및 공공책임성 등 OGP 가치와 관련하여 정부 개방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정부 24 사이트로 편의성이 향상되었으나 신규 정보는 다른 방식으로 요청해야 제공된다는 점에서 신규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 공무원<sup>6</sup>은 정부 24 를 '주민의 행정문서 및 일정을 관리하는 친절한 비서'라고 설명한다. 정부 24 는 시민들이 소득확인 증빙자료, 건강보험 자격 등 공문서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사이트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기간, 학자금 대출 잔액 등 필수적인 생활정보를 한 눈에 보여준다. 동 사이트는 또한 출산, 취업, 상속 등 중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 혜택을 모아서 보여준다. 2017 년 말 사용자 수는 354 만 명이었으나 올해 877 만명을 초과하였다. 지난 10 개월 간 2.5 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 사이트 개선으로 인터넷 문서발급이 더 편리해졌다. 2018 년 10 월 이용건수는 740 만 건이었다. 참고로 하루 평균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는 64,000 건이다.

통합서비스포털 정부 24 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 20 명 모두 정부 24 가 상당히 사용자 친화적이며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잘 되어 있다고 봤다. 이들 중 일부는 주요 47 개 항목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좋은 점을 강조하였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안전 점검 및 기타 유사 조치 시기를 상기시켜 준다. 한편 사이트에 많은 정보와 서비스가 있어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93%)<sup>7</sup>에도 고령층이나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 정부가 이미 그러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동 관계자가 밝혔다.<sup>8</sup>

## 이월되었습니까?

동 공약은 차기 실행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다.

<sup>1</sup>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sup>2</sup> "South Korea Mid-Term Self Assessment Report (대한민국 중간자체평가 보고서)",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7. 11. 17.,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고승지, 행정안전부, IRM 연구원과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대화, 2019. 3.

<sup>3</sup> '행정서비스 통합 및 연계 진행상황과 계획' 정부 내부문서.

<sup>4</sup> 행정안전부 공무원,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7. 12.

<sup>5</sup> "End-of-Term Self-Assessment Report on 3rd National Action Plan (2016–2018)(제 3 차 국가실행계획(2016-2018)에 대한 최종자체평가 보고서)",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대한민국 정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wp-content/uploads/2018/11/South-Korea\\_End-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https://www.opengovpartnership.org/wp-content/uploads/2018/11/South-Korea_End-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sup>6</sup> 이별찬, '정부 24 는 주민 행정서류·일정 챙겨주는친절한 비서', Chosun.com, 2018. 12. 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2710.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2710.html).

<sup>7</sup> "Internet usage in South Korea - Statistics & Facts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통계와 사실)",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2020. 1. 16., <https://www.statista.com/topics/2230/internet-usage-in-south-korea/>.

<sup>8</sup> 실행계획평가 기간 이후 발표 시점에 정부 24 사이트 이용자 수는 2019 년 1 월부터 9 월까지 1 억 4,800 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이용건수는 773 만 건으로 증가하고 '나의 생활정보' 건수는 55 개로 증가하였다. OGP 담당자와 IRM 직원 간 이메일 서신, 2019. 10. 25.

##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 공약 본문:

제목: 반부패 및 공직 윤리-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청렴도 조사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평가 근거 마련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평가 근거 마련 등을 계기로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청렴도 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조사·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주관 부처(들):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기관(들):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시작일: 2016. 3.3. 종료일: 2018. 6. 30.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성 (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이 명	이 명	가 장	이 명	정 적	시 민 참 여	국 민 투 명 성	국 민 투 명 성 과 연 계 성	이 명 의 영 향 력	이 명 의 영 향 력	이 명 의 영 향 력	이 명 의 영 향 력	미 착 수	제 한 적	상 당 한	이 명 의 영 향 력	이 명 의 영 향 력	이 명 의 영 향 력	이 명 의 영 향 력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			✓					✓						✓			✓	

### 공약 목표: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공공부문 투명성과 부패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시민들도 정부 내부운영 체계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였다. 공약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연례 내부 반부패 조사에 '부정청탁' 항목을 추가하고 공공부문 반부패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질문 하나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 지위

### 중간: 완료

공약은 중간보고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 자체평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733개 공공기관 평가 시 자체 조사에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였다.<sup>1</sup> 이는 ‘공무원(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 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부패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수장들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sup>2</sup> 결과는 한 달 이상 게재해야 한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둘러싼 부패 경험 및 인식과 반부패 사업 효과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조사에 새로운 질문 2개를 추가하였다.<sup>3</sup> 한 권익위원회 관계자<sup>4</sup>는 2017년 12월 6일 조사결과 관련 보고회의가 열렸고 회의결과는 현재 권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으며 IRM 연구원도 이를 확인하였다.<sup>5</sup> 2016-2017 IRM 중간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완료

공약은 중간보고서 시점에 완료되었다. IRM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이 공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추가적인 활동은 보지 못했다.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정보 접근성: 미미함

접근성 측면에서 정부관행 변화는 미미하였다. 질문을 조사에 추가하는 것이 공공기관 부패수준 측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적극적인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반부패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내부자 관점과 특정 공공기관 내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부패행동에 관해 형성된 내부자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가 익명으로 유지될 지 및 향후 신원이 밝혀졌을 때 자신의 답변이 문제시될 지에 대한 내부자 신뢰가 낮다. 이는 인터뷰 답변에서도 확인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 등 유명 시민사회단체 2곳<sup>6</sup> 과 전 국무총리실 공무원<sup>7</sup>은 이 조사가 공공부문 부패 측정 및 평가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공약으로 인한 변화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우려하였다. IRM 연구원도 추가된 질문이 공무원들의 부패 목격 경험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응답자들이 답변의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솔직한 답변을 하기 꺼리려울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외부 사회조사 기관이 조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제재 수립 및 적용, 현장 감독, 정기적인 신뢰성 저해 행동 보고체계 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조사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8</sup> 또한 정부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직접 경험보다는 인식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익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공공 행정 및 공공정책 사업 참여 대학원생 15 명<sup>9</sup> 중 80% 이상이 전체 조사에 질문 하나 추가하는 것이 부패 근절 효과에 충분하지는 않으며 이것이 정부가 야심차게 부패 근절 행동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부정청탁 항목은 부패 경험률, 빈도,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특정 질문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반부패 조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조사를 통해 각 공공기관별 부패 구조와 규모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지나치게 범위가 좁았던 보고 요건에서 개선된 것이다. 공공기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조사를 활용하는 데 또다른 취약점은 이런 종류의 설문지에서 반드시 사소한 부패와 심각한 부패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에서는 공약목표 설명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ived Index, CPI)를 활용하고 있다. 공약의 전반적인 목표는 모두를 위한 부패근절일 것이다.

## 이월되었습니까?

동 공약은 차기 실행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다.

<sup>1</sup> "South Korea Mid-Term Self-Assessment Report (대한민국 중간자체평가 보고서)",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7. 11. 17.,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sup>2</su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http://www.acrc.go.kr/en/data/1.0.ACRC%20Act.pdf>.

<sup>3</sup> 새로 추가된 두 질문은 '귀하의 동료, 상사 혹은 부하직원이 지난 1 년간 관련 당사자 또는 제 3 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 기관이 부패방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여기서 사업이란 협의, 내부고발자 보호, 교육, 홍보 등을 가리킨다.)다.

<sup>4</sup> 원현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사무관, IRM 연구원의 인터뷰

<sup>5</sup> 이기환, 국민권익위원회, "2017 년 공공기관 청렴도 7.94, 전년 대비 0.09 점 상승", 2017, 12. 6.,

<sup>6</sup>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위원, IRM 연구원과의 전화통화, 2018. 10.

<sup>7</sup> 전 공무원/2013-2016 총리실 연구원, IRM 연구원과의 면대면 논의, 2018.2. 인터뷰 응답자는 익명을 요구하였다.

<sup>8</sup> OGP 담당자와 IRM 직원 간 이메일 서신, 2019. 10. 25.

<sup>9</sup>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생들, IRM 연구원과의 대화 중 전화인터뷰 설문조사, 2018. 2. 모두 익명을 요구하였다.

##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 공약 본문:

제목: 재정투명성 제고-국제원조 정보 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에 따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EDCF)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 약 740 건에 대한 정보를 IATI 요구양식에 맞게 변환하여 공개한다. 우선 기관명, 사업식별자, 사업명, 사업설명 및 현황, 참여기관, 수원지역·분야 등 13 개 필수 항목의 공개를 2016 년 중 실시하고 이후 필수공개항목에 대한 공개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며 향후 ODA 정보 공개 범위 및 참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1 차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약 740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IATI 가 선정한 39 개 공개항목 중 13 개 필수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이후 나머지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주관 부처(들): 국무조정실 (한국수출입은행)

지원기관(들): 외교부 개발정책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과

시작일: 2016 . 7. 1. 종료일: 2018. 6. 30.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성 (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이 표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		✓					✓										✓	

### 공약 목표:

대한민국 정부는 2015 년부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활동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IATI 는 공여국, 민간부문, NGO 등이

활용하는 개발협력 활동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는 자발적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다. 현재 ODA 성과, 향후계획 및 전략에 관한 정보가 ODA 및 IAT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sup>2</sup> 이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활동은, 첫째, 현재 진행 중인 740 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EDCF) 사업 등과 관련하여 IATI 가 선정한 13 개 항목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둘째,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공개 예정 사업 범위와 정보항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 지위

### 중간: 상당한

이 공약은 중간보고서 시점까지 상당 수준 완료되었다. 정부는 2016 년 8 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할 예정인 개도국 지원 사업 740 개에 대해 13 개 필수항목 정보를 전면 공개하였다. 이 정보는 ODA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하다.<sup>3</sup> 13 개 항목은 기관식별 ID, 기관명, 보고기관 유형, 사업 식별 ID, 보고기관, 사업명, 사업설명, 참여기관, 사업현황, 사업날짜, 수원국, 수원지역 및 분야다. 또한 두 번째 주요 활동인 정보항목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는 자발적으로 항목을 13 개에서 18 개로 확대하였다. ODA 관련 사업 세금 이용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 요구 충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 수도 증가하였다. 2016-2017 중간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완료

정부는 중간보고서 기간까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도국 지원 사업 740 개에 관하여 13 개 필수항목 정보를 전면 공개하였다. 13 개 필수항목 외에 정부는 항목 수를 13 개에서 18 개로 늘렸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른 ODA 사업 정보도 더 많이 공개하였다.<sup>4</sup> 전체적으로 2018 년 6 월 현재 시민들은 ODA 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통합되어 있는 49 개 공공기관 및 일부 지방정부(2,714 ODA 사업)와 관련하여 22 개 항목의 ODA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정보는 ODA 사이트 [www.ODAKorea.go.kr](http://www.ODAKorea.go.kr) 에 공개되어 있다.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정보 접근성: 미미함

공약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정부 개방성에 미미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과 ODA 사업 관련 협력을 하고 있는 NGO 대표 3 명<sup>5</sup>은 대한민국 정부의 자발적인 IATI 가입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IATI 회원국이 최소 13 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다 투명한 환경 조성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기관식별 ID, 기관명, 보고기관 유형, 사업식별 ID, 보고기관, 사업명, 사업설명, 참여기관, 사업현황, 사업날짜, 수원국, 수원지역, 분야 등 추가된 정보의 질적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 중 상당수는 모두 ODA 정보 시스템과 같은 단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도 전부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공약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미미한 정도로 기여했을 뿐이다. 공공행정 및 정책 전공 대학원생 10 명<sup>6</sup>은 한국이 ODA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약 25 억 달러(USD)가 연간 정부예산의 1%도 안 되지만 시민들을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ODA 자금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질수록(2,000 만 달러(USD) 이상 등) 규모가 더 작고 자금이 덜 들어간 다른 ODA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관련 세부정보, 통계정보, 확장성 및 모범관행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의 IATI 가입효과 확대 외에 정부는 현재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다른 정부기관도 ODA 사업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여 공개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월되었습니까?

이 공약은 차기 실행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다.

---

<sup>1</sup>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홈페이지, <https://www.aidtransparency.net/about>.

<sup>2</sup>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ttp://www.odakorea.go.kr/index.jsp>.

<sup>3</sup> “주요 정책 문서”,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1\\_S02.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1_S02.jsp).

<sup>4</sup> IRM 연구원은 항목 리스트가 담긴 정부 내부분서 접근에 대해 승인받았다. 추가 항목은 사업협력형태, 흐름형태, 자원형태, 원조형태, 자금거래다.

<sup>5</sup> 세 곳의 NGO 단체 대변인, IRM 연구원과의 대화, 2018. 11.

##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 공약 본문:

제목: 재정투명성 제고 -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현재 ODA 시행부처 및 기관별 자금형태, 원조유형, 분야, 지역별 지원현황 등 총 지원현황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는 ODA 통계정보를 ODA 통계 시스템 개편을 통해 ODA 로 지원된 개별 사업의 목적이나 설명, 사업실시 기간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ODA 로 지원되는 개별사업의 목적이나 설명, 사업실시 기간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과 통계제공이 가능하도록 ODA 통계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주관 부처(들): 국무조정실, 한국수출입은행

지원기관(들): 외교부 개발정책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통계작업반 (WP - STAT)

시작일: 2016. 7. 1.                      종료일: 2018. 6. 30.

공약 개관	구체성				OGP 가치와의 관련성(서면상)				잠재적 영향력				완료		중간 최종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이 표	이 표	가 치	예 내	과 제	시 미	관 여	과 제	이 의	성 과	과 제	이 의	영 향	미 한	제 한	영 향	미 한	영 향	미 한	영 향	미 한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			✓								✓									✓

### 공약 목표:

제 3 차 실행계획 수립 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통계시스템에서는 시행부처, 자금형태, 원조유형, 원조분야 및 지역별 지원현황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ODA 는 공여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다자기구에서 개도국으로 재원이 이동하는 것이다. ODA 의 주요 목표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ODA 통계시스템은 주로 지원현황 등 정보에 집중되어 있어 제공되는 정보를 시민들이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 공약은 ODA 통계시스템을 개편하고 각 ODA 사업의 목적, 설명 및 기간 등 상세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지위

### 중간: 상당한

공약은 중간보고서 시점에 상당히 완료되어 있었다. 정부가 ODA 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였지만 ODA 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공개된 정보는 없었다. 정부는 2017년 4월 공식적으로 통합 ODA 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하였다.<sup>2</sup> 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이제 이행기관들이 각 사업 개요, 기간 및 지출 등 사업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다.<sup>3</sup> 이 플랫폼에서는 사업 예산과 진행상황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표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검색 페이지 시각화 기능이 보다 사용자친화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2017년 5월 국무총리실은 이행기관들의 ODA 관리시스템 활용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조직하였다. 한 공무원은 그동안 모니터링시스템과 통계시스템 모두 개편되었다고 밝혔다.<sup>4</sup> 2016-2017 IRM 중간보고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완료

이 공약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7년 4월 현재 통합 ODA 관리시스템(stats.odakorea.go.kr)이 본격 가동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공식 대한민국 ODA 홈페이지([www.odakorea.go.kr](http://www.odakorea.go.kr)) 'ODA 통계조회 기능' 및 통합 ODA 보고시스템(stats.odakorea.go.kr)과 연동되어 있다. 동 시스템은 대한민국 ODA 통계와 국가별 매핑, 통계수치 자동산출 등 더 자세한 분석기능도 제공하여 이용자 누구나 전반적인 ODA 지위 정보 및 통계를 검색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8년 6월 현재 2016년도 통계는 제공되고 있으나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는 발표만 되었고 공약 종료일까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IRM 연구원이 참여 공공기관 중 한 곳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요청한 정보가 '내부 문서'로 간주되어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후 정부는 ODA 사업이 정부 간 거래(G2G)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수원국 승인 없이 추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문서 소유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제 OECD 보도유예(embargo)가 해제되어 2018년 6월 현재 동 시스템에서 ODA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 정부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 정보 접근성: 미미함

대한민국 ODA 홈페이지([www.odakorea.go.kr](http://www.odakorea.go.kr))와 ODA 통계 ([www.stats.odakorea.go.kr](http://www.stats.odakorea.go.kr))가 일반 ODA 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대중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기존 두 홈페이지에서도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IRM 연구원은 공약의 모호한 설명과 이월된 방식으로 인해 공약을

검증하고 공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줄 인터뷰 응답자를 구할 수 없었다. 이 분야와 밀접한 활동을 하며 현재 가용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약 이행 전후로 달라진 점을 감지하지 못하였다.<sup>5</sup> 그러나 IRM 연구원은 이용자들이 보고, 다운로드 받고 보다 심도 있는 ODA 사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매핑과 통계수치 자동산출 기능 등 새로운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면서<sup>6</sup> 정보 접근성이 미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월되었습니까?

동 공약은 차기 실행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다.

---

<sup>1</sup> '공적개발원조란(What is ODA?)',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Korea ODA), <http://www.odakorea.go.kr/eng.overview.What.do>.

<sup>2</sup> 공적개발원조, ODA 통계보고 시스템, [www.stats.odakorea.go.kr](http://www.stats.odakorea.go.kr).

<sup>3</sup> 정지인, "South Korea Mid-Term Self-Assessment Report (대한민국 중간자체평가 보고서)",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십), 2017. 11. 17., 2019. 2. 접속,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sup>4</sup> 위와 동일.

<sup>5</sup> NGO 대변인, IRM 연구원과의 논의, 2019. 4.

<sup>6</sup> 정현이, 공약 6b 담당자, ODA 국 전문위원, IRM 연구원과의 전화 대화, 2018. 3.

## 방법론적 소고

최종 보고서는 정부 및 비정부 이해관계자들과 진행한 탁상조사 및 인터뷰를 기초로 하고 있다. IRM 보고서는 정부 자체평가 보고서, 시민사회, 민간부문 또는 국제기구가 발표한 기타 진행상황 평가들, 이전 IRM 진행상황 보고서를 발전시킨 것이다. 본 국문보고서는 제 3 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본 보고서는 정부사업, 법 및 시행령 탁상검토, 정부 자체평가 검토, 정부 및 지방기관 홈페이지, 정부 OGP 담당자,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언론 모니터링,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정지인**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생이다. 정 씨는 뉴욕대학교에서 재정학 전공으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주 연구 분야는 정치, 거버넌스, 민관 파트너십, 인권 등이다.

열린정부파트너십 (**OGP**)은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강화, 부패 방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공약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OGP의 독립보고메커니즘(IRM)은 이해관계자들 간 대화를 촉진하고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평가한다.